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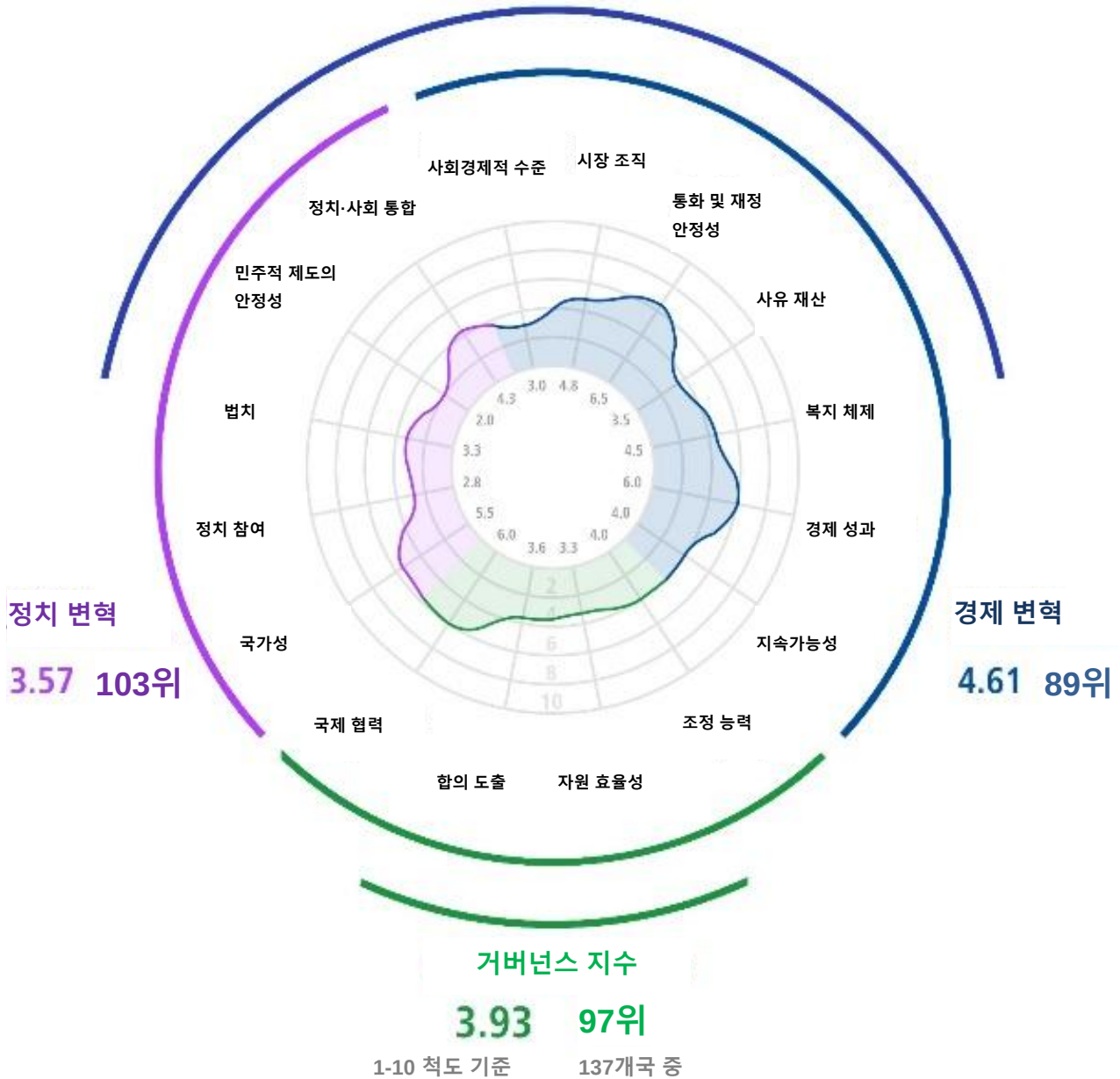
본 자료는 법무부에서 외주 사업을 통해 번역한 문서로,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인용이 불가합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처원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룬

지위 지수

4.09 103위

1-10 척도 기준 137개국 중



이 보고서는 베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의 2024 변혁지수(Transformation Index, BTI)와 관련된 문서다. 이 보고서는 2021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다룬다. BTI는 137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변혁 및 거버넌스의 질을 평가한다. BTI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bti-project.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를 인용할 경우, 인용 표기는 다음과 같다: Bertelsmann Stiftung, BTI 2024 Country Report — Cameroon. Gütersloh: 2024.

본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연락처

베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
Carl-Bertelsmann-Strasse 256
33111 Gütersloh(Gütersloh), 독일(Germany)

자비네 도너(Sabine Donner)

전화
+49 5241 81 81501
sabine.donner@bertelsmann-stiftung.de

하우케 하르트만(Hauke Hartmann)

전화
+49 5241 81 81389
hauke.hartmann@bertelsmann-stiftung.de

자비네 슈타인캠프(Sabine Steinkamp)

전화
+49 5241 81 81507
sabine.steinkamp@bertelsmann-stiftung.de

핵심 지표

인구	백만 명	27.9	인간개발지수(HDI)	0.576	1인당 GDP, 구매력평가(PPP)	달러	4408
인구 증가율 ⁽¹⁾	연평균 %	2.6	인간개발지수 순위(189개국 중)	151	지니 계수		46.6
기대 수명	년	60.3	유엔 교육 지수	0.569	빈곤율 ⁽³⁾	%	47
도시 인구	%	58.7	성불평등 지수 ⁽²⁾	0.565	1인당 원조액	달러	41.4

출처(2023년 12월 기준): 세계은행(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유엔개발계획(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2. 각주: (1) 연평균 증가율. (2) 성불평등 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 (3) 2017년 국제 가격 기준 하루 3.6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 비율.

개요

카메룬은 1980년대 후반에 경제 전환 과정을 시작했으며, 이어서 1990년대 초반에 정치적 변화를 맞이했다. 아마두 아히조(Ahmadou Ahidjo) 대통령 재임 시기에는 농업, 교육, 보건, 교통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히조의 통치는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국가 체제를 바탕으로 한 억압적 통치였으며, 그는 자신과 같은 카메룬 북부 출신 민족 집단을 우대하는 인물로 평가받았다. 1977년 해상 유전의 발견은 경제 성장을 촉진했지만, 동시에 부패와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의 증가를 초래했다. 아히조에서 폴 비야(Paul Biya)로의 정권 교체는 1984년의 쿠데타 시도와 경제 위기로 점철된 격동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비야는 '새로운 정책(New Deal)'과 구조 개혁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정부, 집권당, 경제 분야에서 주요 직위를 차지한 남부 출신 동족에 크게 의존했다. 이는 부패와 민주화 및 경제 개혁에 대한 저항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1980년대 후반 카메룬에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

1989년 카메룬은 국제 대출기관들과 구조조정 차관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에는 은행 부문 개혁, 민영화, 무역 자유화, 재정 긴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개혁 속도는 느렸고, 세계은행(World Bank)은 카메룬을 가장 실망스러운 구조조정 국가 중 하나로 분류했다. 2000년 이후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은행 및 통신 부문의 경쟁 확대로 개혁이 탄력을 받았다. 카메룬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고채무빈곤국 이니셔티브(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HIPC) 자격을 획득하여 채무 부담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거시경제 지표와 복지 지표를 안정화하는데 진전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대출기관들은 부실한 거버넌스와 만연한 부패로 인해 개혁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메룬은 인프라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비양허성 대출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반면, 인적 개발에 대한 투자는 감소했다.

카메룬의 민주적 전환 역시 1980년대 경제 위기에 의해 촉발되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활동, 대규모 시위, 국제사회의 압력이 정권의 다당제 선거 허용으로 이어졌다.

수많은 정당이 등장했으며, 대부분 민족적 또는 지역적 지지 기반에 기초했다. 그러나 선거 전에 헌법 개혁을 시작하도록 정부를 압박하려던 시도는 실패했고, 1992년 총선과 대선은 심하게 조작되어 집권당이 근소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 이후 정권은 야당을 소외시켜 '선거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했다.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서 약간의 개선이 있었지만, 비야는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2006년 정권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대규모 반부패 캠페인인 '참새매 작전(Operation Sparrowhawk)'을 시작했다. 2008년 국회는 대통령 연임 제한을 폐지하여 대규모 시위와 국가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2014년에는 광범위한 반테러법이 통과되어, 반국가 범죄를 정의하는 데 있어 정권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반대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군사재판소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2018년 폴 비야는 또다시 부정 선거 논란 속에서 당선되며 35년간 이어온 자신의 재임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카메룬은 국가 권력에 맞선 심각한 무장 투쟁을 여러 차례 겪어 왔다. 2009년 이후 지하디스트 단체인 보코하람(Boko Haram)이 극북부주(Extreme North Region)의 카메룬-나이지리아 국경을 따라 활동해 왔다. 분쟁은 2013년에서 2014년까지의 정점을 지나 진정되었지만, 상당한 피해를 남겼다. 한편, 2017년 이후 영어권 지역들은 식민지 시대에서 비롯된 언어적·문화적 차별에 대한 오랜 불만으로 인해 격렬한 내전에 휘말려 왔다. 평화로운 시민사회 시위가 잔혹한 국가 탄압에 직면하면서 분쟁이 격화되었다. 현재 여러 무장 단체들이 '암바조니아(Ambazonia)' 독립을 목표로 싸우고 있다. 그러나 분쟁 해결을 위한 시도들은 대체로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으며,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전환의 역사와 특성

카메룬은 1980년대 후반에 경제 전환 과정을 시작했으며, 이어서 1990년대 초반에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아마두 아히조 대통령 재임 시기에는 농업, 교육, 보건, 교통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히조의 통치는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국가 체제 아래 이루어진 억압적 통치로, 그는 자신과 같은 카메룬 북부 출신 민족 집단을 우대하는 인물로 평가받았다. 1977년 해상 유전의 발견은 경제 성장을 촉진했지만, 동시에 부패와 지대추구 행위의 증가를 초래했다. 아히조에서 폴 비야로의 정치적 전환은 격동적이었으며, 1984년의 쿠데타 시도와 경제 위기로 점철되었다. 비야가 '새로운 정책'과 구조 개혁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대, 정부, 집권당, 경제 분야에서 주요 직위를 차지한 남부 출신 동족에 크게 의존했다. 이는 부패와 민주적·경제적 개혁에 대한 저항을 더욱 강화시켜, 1980년대 후반 카메룬에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

1989년 카메룬은 국제 대출기관들과 구조조정 차관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에는 은행 부문 개혁, 민영화, 무역 자유화, 예산 제약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개혁 속도는 느렸고, 세계은행은 카메룬을 가장 실망스러운 구조조정 국가 중 하나로 분류했다. 2000년 이후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은행 및 통신 부문의 경쟁 확대로 개혁이 탄력을 받았다.

카메룬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고채무빈곤국 이니셔티브(HIPC) 자격을 획득하여 채무 부담이 크게 감소했다. 카메룬은 거시경제 지표와 복지 지표를 안정시키는 데 진전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대출기관들은 열악한 거버넌스와 만연한 부패로 인해 개혁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메룬은 인프라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비양허성 대출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반면, 인적 개발에 대한 투자는 감소했다.

카메룬의 민주적 전환 역시 1980년대 경제 위기에 의해 촉발되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활동, 대규모 시위, 국제적 압력 등으로 정권이 다당제 선거를 허용했다. 수많은 정당이 등장했으며, 대부분 민족적 또는 지역적 지지 기반에 기초했다. 그러나 선거 전 헌법 개혁을 시작하도록 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는 실패했고, 1992년 의회 및 대통령 선거는 심하게 조작되어 집권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이후 정권이 야당을 소외시키자 국가는 '선거 권위주의' 상태에 이르렀다.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부문에서 약간의 개선이 있었지만, 비야는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2006년 정부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대규모 반부패 캠페인인 '참새매 작전'을 시작했다. 2008년 국회가 대통령 임기 제한을 폐지하자 대규모 시위와 국가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2014년에는 광범위한 반테러법이 통과되어 정권에 반국가 범죄를 정의하는 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반대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군사재판소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2018년 폴 비야는 또 다른 논란이 된 선거에서 승리하여 35년간 이어오던 자신의 재임 기간을 연장했다.

카메룬은 또한 무장단체들로부터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2009년 이후 지하디스트 단체인 보코하람이 극북부 지역의 카메룬-나이지리아 국경을 따라 활동해 왔다. 분쟁이 2013~2014년 정점을 기록한 뒤 진정되었지만, 상당한 피해를 남겼다. 2017년 이후 영어권 지역들은 식민지 시대에서 비롯된 언어적·문화적 차별에 관한 오랜 불만에서 기인한 격렬한 내전에 휘말려 왔다. 평화로운 시민사회 시위를 국가가 잔혹하게 탄압하면서 분쟁이 격화되었다. 현재 여러 무장 단체들이 '암바조니아'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러나 분쟁 해결 노력은 대체로 상징적이었으며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BTI는 텍스트 분석과 수치 평가를 결합한다. 각 질문에 대한 점수는 각 항목 아래에 제공된다. 척도는 1(최저)에서 10(최고)까지이다.

전환 현황

I. 정치적 전환

1 | 국가성

카메룬 영어권 지역(북서부주 및 남서부주)에서 진행 중인 분리주의 운동은 국가의 무력 사용 독점권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 2017년 10월, 자칭 임시정부(Interim Government, IG)와 암바조니아 통치위원회(Ambazonian Governing Council, AGC)가 모두 카메룬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한 반란 활동에 참여하는 여러 지역 민병대의 활동을 운영하거나 조정한다. 무장 단체들은 또한 정부에 협조적이거나 경제적·정치적 보이콧 등의 반란 활동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는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인들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정부가 조직한 자경단 역시 암바조니아 무장 단체에 협조하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는다. 카메룬 정부가 주도한 장기간의 대(對)반란 작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는 진정되지 않았으며, 휴전이나 화해를 위한 제대로 된 시도도 전무한 실정이다. 2017년 이후 70만 명 이상이 실항민이 되었고, 6만 명이 난민이 되었으며, 약 150만 명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 위기로 인한 사망자는 4,000명을 넘어선다.

국가의 무력 사용 독점권은 외딴 극북부주에서도 위협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는데, 카메룬 군대가 영어권 지역으로 재배치된 점도 일부 요인이다. 약 1만 4,000명의 구성원을 가진 수많은 자경단 조직이 존재하며, 이들은 가축 절도, 밀수, 강도 등 범죄 활동에 연루되어 비판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Central African Republic, CAR) 분쟁의 여파가 카메룬 동부 국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장 단체들이 강도와 납치에 가담하여 국경이 자주 폐쇄되고 상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북서부주 및 남서부주에서 국가가 후원하는 자경단 조직이 확산되고 있는 현상은 카메룬 군이 무력 사용 독점권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더욱 보여준다.

질문 점수

무력 사용의 독점

5

'06 '24 10



1

인구의 대다수가 카메룬을 정당한 국민국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시민권의 평등한 보장 등 관련 사안에서도 큰 문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존재해 온 영어권 지역과의 긴장은 국가 정체성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영어권 정체성은 카메룬의 독특한 이중 식민지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더 넓은 프랑스어권 영토와 상대적으로 작은 영어권 영토 간의 연방 체제 형성으로 이어졌다. 1972년 정치적 중앙집권화 과정과 연방제 폐지는 영어권 주민들 사이에서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차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 많은 곳에서 이를 '영어권 문제(Anglophone problem)'라고 지칭했다. 최근까지 대부분 영어권 인구의 요구는 통일된 카메룬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지 않았다. 2016년 11월 역사적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시위 운동이 장기적인 분리주의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영어권 지역의 독립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영어권 인구의 일부는 연방제로의 복귀를 지지하지만, 다른 일부는 카메룬 북서부와 남서부 영토를 아우르는 암바조니아의 완전한 독립을 지지한다.

카메룬 북부에서 벌어지는 보코하람과의 분쟁 역시 국가 정체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카메룬 청년들은 강제로 징집되거나 경제적 궁핍 때문에 보코하람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보코하람은 국경을 넘어 문화적, 가족적 유대를 가진 카누리(Kanuri) 집단 구성원들을 의도적으로 포섭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더 넓게 보면, 카메룬 주변부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중앙정부의 권위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카메룬은 일반적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공식적인 국교는 없지만, 정부는 로마 가톨릭교회 및 장로교회 신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북부 정치인들은 폰(Fons) 또는 라미도(Lamidos)라고 불리는 무슬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무슬림 지도자들은 1982년 비야가 집권했을 때 핵심적인 정치 동맹이 되었다. 지역 종교 지도자들은 때때로 지역 문제를 관리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았다. 식민지 시대에 채택된 법전은 관습법과 이슬람법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지역 법원(영어권 지역에서는 '알칼리(Alkali) 법원', 프랑스어권 지역에서는 '1심 법원(Courts of First Instance)'으로 알려짐)은 특히 상속, 승계 및 개인법 문제와 관련하여 때때로 성문법보다 우선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또한 주요 종교 단체들이 지지하는 사회보수적인 가치관이 성소수자 공동체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카메룬에서 동성 간 성행위는 불법이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가 정체성

5

'06 '24 10



1

종교 교리의 불간섭

7

'06 '24 10



1

정부 기관과 행정 조직은 국가 대부분의 지역에 존재하지만, 성과나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대체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인구의 44.6%만이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식수와 전기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도 각각 65.7%, 64.7%로,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

카메룬은 10개 주(州)로 나뉘며, 각 주는 대통령이 임명한 주지사와 간접선거로 선출된 의회가 통치한다. 자치권 확대에 대한 요구에 따라 2019년 영어권 지역에는 프랑스어권 지역의 의회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지역 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특별 지위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지역 의회는 여전히 매우 취약하며, 대통령이 임명한 주지사의 통제 하에 놓여 있다. 지역은 58개 도(道) 또는 구(區)로 세분화되며, 대통령이 임명한 도지사가 이를 관할한다. 도는 360개의 선출직 시의회와 14개의 비선출직 의회에 해당하는 하위 구역으로 나뉜다.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화는 부분적으로만 시행되었으며 실질적인 자원 배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지방 의회는 지방세와 면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다). 그 결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며, 특히 인구의 약 절반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서 그러하다. 국가 인구의 절반만이 개선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농촌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20%로 더욱 낮다. 국가 인구의 약 3분의 1은 전기나 안전한 수원에 접근할 수조차 없다.

정부의 모든 계층에서 부패가 만연하다. 경찰, 사법부, 세무 및 세관 공무원들 사이에서 경미한 부패 사례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여러 고위 정부 관리들이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상당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카메룬의 많은 엘리트들이 대규모 부패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에서 ‘참새매 작전(Operation Sparrowhawk)’이라고 불리는 고위 엘리트 기소는 비야의 정적들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으로 인식된다.

2 | 정치 참여

1992년 이후 다당제 선거와 사실상의 보통선거권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선거 공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있다. 노골적인 부정행위는 감소했지만, 야당들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선거관리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Cameroon, ELECAM)의 편향성을 비난해 왔다.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ELECAM)의 위원 전원을 임명하며, 유권자 등록과 선거 관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선거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두 차례(2012년과 2018년) 연기되었으며, 국영 매체는 주요 후보와 정당에 대해 균등한 보도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 현직 대통령 폴 비야는 1982년부터 집권해 왔으며 2008년에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상원의원과 지역 의회 의원은 모두 시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로 선출된다. 이는 정권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 더욱이 상원 의석의 30%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며, 지역 의회의 22%는 국가가 인정한 전통 추장들로 채워진다.

기본 행정

5

'06 '24 10



1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3

'06 '24 10



1

영어권 지역 관련 위기는 선거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켰다. 2020년 영어권 지역의 극도로 긴장된 치안 상황 속에서 총선과 지방 선거가 실시되었다. 사회민주전선(Social Democratic Front, SDF)과 카메룬르네상스운동(Cameroon Renaissance Movement, MRC)은 치안 환경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로 선거를 보이콧했다. 영어권 지역의 투표율은 극히 저조했으며, 선거 과정에 참여한 후보자들은 분리주의 단체들의 폭력적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2020년 12월 지역 의회 선거 역시 주요 야당들의 보이콧 속에 치러졌다. 2023년 상원 선거에서도 치안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 선거에서 여당이 70석 전부를 차지했고 대통령이 야당 인사 5명을 포함한 30명의 상원의원을 추가로 임명했다.

카메룬은 명목상 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부와 지역 및 지방 의회를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치 권력은 대통령실에 크게 집중되어 있다. 카메룬 헌법은 대통령에게 장관과 고위 공무원을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광범위한 공식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주지사, 구청장, 하위 구청장은 선출직 공무원의 권한을 무효화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인정한 전통 추장 역시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활동하며 선출직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또한 모든 군부대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고위 장교단의 대부분을 임명한다. 비상 권한이 모호하게 정의된 탓에 대통령의 권력은 더욱 강력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상시 대통령은 3개월 동안 법치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권한은 2014년 반테러 법안의 통과와 함께 더욱 확대되었는데, 이 법은 테러를 국가 기능을 위협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특정 범죄를 군사재판소에서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카메룬 대통령은 여당에 대한 통제와 카메룬 정치 체제에서의 중심적 위치를 바탕으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추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여당인 카메룬인민민주운동(Cameroon People's Democratic Movement, CPDM)이 카메룬 정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당은 대부분의 정치적 야망을 지닌 인사들이 입당을 희망하는 정당이다. 당 의장으로서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당원과 선출직 의원들의 정치 경력을 좌우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충성파를 양성할 수 있다. 또한 35년 이상 집권해 온 폴 비야는 그 기간 동안 국가 기구와 군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후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러한 후원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비야의 남부 출신 동족에게 혜택을 주며, 불안정한 다민족 연합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승계에 대한 문제는 수년간 카메룬에서 크게 부각되어 왔으며, 많은 엘리트들은 비야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체제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는다.

효과적인 통치 권한

2

'06 '24 10

3 2 1

원칙적으로 카메룬 헌법은 결사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권리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시민들은 단체와 정당을 결성할 수 있으며, 현재 100개 이상의 등록 정당과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가 있다. 그러나 2017년 1월, 정부는 2014년 반테러 법안에 따른 권한을 사용하여 두 개의 영어권 지역 옹호 단체인 남부카메룬국민회의(Southern Cameroon National Council, SCNC)와 카메룬영어권시민사회연합(Cameroon Anglophone Civil Society Consortium, CACSC)에 활동 금지 처분을 내렸다.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는 카메룬 당국이 통상적으로 안보 및 보건 관련 우려를 집회를 금지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반면, 친정부 단체의 공개 시위는 대체로 허가했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무부가 보고한 바와 같이, 두알라(Douala)의 한 정부 관리는 2021년 2월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Friedrich Ebert Foundation)이 주최한 3일간의 세미나를 금지했다. 이 세미나의 목적은 야당인 카메룬르네상스운동(MRC)과 사회민주전선(SDF) 소속 당원들에게 정치적 소통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집회의 권리는 결사의 권리보다 더 자주 제약을 받는다. 영어권 지역 위기 기간 내내 정부는 평화적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으며, 비상선언을 통해 통행금지를 시행했다. 카메룬의 다른 지역에서도 정치적 반대 활동은 점점 더 제한되었다. 과거에 국가 기관은 불특정한 사유로 집회 허가를 거부하곤 했다. 최근에는 국가가 2014년 반테러법과 코로나19 팬데믹을 명목으로 이러한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일례로,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 모리스 캄토(Maurice Kamto)와 카메룬르네상스운동(MRC) 당원 350명은 반란 혐의로 거의 10개월 동안 구금되었다.

카메룬 헌법은 언론인과 기타 미디어 종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500개 이상의 언론 매체가 있는 풍부한 미디어 환경에도 불구하고, 카메룬에서 표현의 자유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국영 매체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있으며, 민간 언론 매체 관계자들은 자주 협박을 받는다. 카메룬의 미디어 규제 기관인 국가통신위원회(National Communication Council, CNC)는 검열 대상이 된 사안을 보도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신문 발행을 금지하고 기자들을 제재하는 일을 빈번히 벌인다. 카메룬의 명예훼손법은 특히 적용 범위가 매우 넓어, 정부가 기자와 언론 매체를 명예훼손 및 대통령 모욕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 2014년 반테러법은 정부의 미디어 검열이 허용되는 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 권한은 카메룬 북부에서 보코하람에 맞선 전투 기간과 영어권 지역 위기 기간 동안 정부 활동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제한하는 데 활용되었다. 일례로 카메룬웹(Cameroon Web) 기자 폴 슈타(Paul Chouta)는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으며, 가장 최근 사례는 2022년에 발생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거의 2년 동안 재판 전 구금 상태에 있었다. 2023년 2월, 기자 마르티네즈 조고(Martinez Zogo)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방첩 책임자 레오폴드 막심 에코 에코(Léopold Maxime Eko Eko)와 사업가 장피에르 아무구 벨링가(Jean-Pierre Amougou Belinga)를 포함한 국가 요원으로 추정되는 자들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되었으며, 이들은 체포되었다.

결사/집회의 권리

4

'06 '24 10



1

표현의 자유

2

'06 '24 10



1

표현의 자유는 또한 상당히 축소되었는데, 정부가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영어권 지역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차단했다. 인터넷 서비스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3 | 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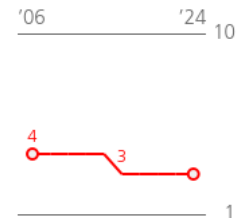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식적 권한과 여당이 수십 년간 국가 기관을 지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입법부와 사법부는 행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당은 의회 의석의 압도적 다수(180석 중 139석)와 상원(100석 중 95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 시의회의 대부분(360개 중 316개)을 장악하고 있다. 야당 인사들이 입법부에서 일부 지도자 직위를 맡고 있는 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묵살된다. 대통령이 카메룬인민민주연합(CPDM) 공천 과정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고분고분한 입법부를 확보하는 또 다른 장치로 작용한다. 정권 충성파인 카바예 지브릴(Cavayé Djibril) 국민의회 의장은 1992년부터 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상원에서는 마르셀 니아트 니지펜디(Marcel Niat Nijifendi)가 2013년 상원 창설 이래 줄곧 의장직을 맡고 있다. 대통령은 또한 카메룬 고등사법위원회(Higher Judicial Council of Cameroon)를 주재하기 때문에 사법부 내 인사를 임명한다. 1992년에 신설된 총리실 역시 임명직 인사로 구성되며, 그 역할은 정부 업무 조정에 한정된다.

일반적으로 인권 보고서들은 카메룬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항상 존중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미국 국무부는 일부 사례에서,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재판 결과가 정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부패한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는 선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판사의 부패나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는 인권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카메룬의 사법부는 행정부에 종속되어 있다. 헌법은 사법권이 입법권 및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규정하지만,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의 보증인으로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은 고등사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임명, 승진 및 징계 처분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대통령이 해당 위원회를 주재하고 대부분의 위원을 임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판사와 검사의 임용 및 인사 전반에 대한 최종 통제권을 행사한다. 판사들의 임기가 보장되기는 하지만, 대통령은 징계 기준을 활용하여 판사를 전보시키거나, 승진을 보류하거나, 일시적으로 해임하거나, 조기 퇴직을 강제할 수 있다. 또한 사법부는 재정적으로 행정부에 크게 의존하며,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급여와 수당 지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 1996년 헌법에서 요구한 대로 2018년에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구성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으로부터 헌법 관련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이관받았으며, 대통령 선거 관련 분쟁을 재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위원 11명을 6년 임기(연임 가능)로 임명하는데, 카메룬인민민주연합(CPDM)의 핵심 측근으로 간주되는 클레망 아탕가나(Clément Atangana)가 재판소장으로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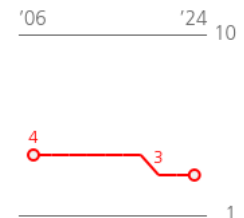
권력 분립

3



사법부 독립

3



사법부의 독립성은 금융 범죄와 테러 기소를 위한 특별재판소 및 법원 체계의 신설로 인해 더욱 약화되었다. 2011년에 공금 횡령 사건을 다루기 위해 특별형사법원이 설립되었으나, 많은 사람은 이 법원을 집권 정권이 정치적 비판자와 반대 세력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본다. 2014년 반테러법은 테러리즘을 국가의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정의하며, 정부가 일반 사법 체계 대신 군사재판소를 통해 기소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운 권한이 정치적 반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그러한 경향은 특히 카메룬 북부의 보코하람 대응 작전과 영어권 지역의 정부 활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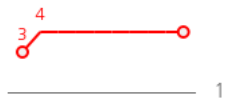
공공 부패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으며, 범법자에 대한 기소는 선별적이고, 일반적으로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카메룬에는 부패 척결을 명목으로 설립된 여러 기관이 있다. 2000년에 국가반부패감시원(National Anti-Corruption Observatory)이 설립되었으나, 지속적인 재정 기반이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부족했다. 2006년에 국가반부패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NACC)가 이 기관을 대체했으며, 2011년에는 특히 심각한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공무원을 기소하기 위해 특별형사법원이 설립되었다. 2006년에 '참새매 작전'으로 알려진 조직적인 반부패 노력이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장관, 전직 총리, 국영기업의 여러 관리자를 포함한 주요 공무원에 대한 기소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그러나 관찰자들은 이러한 반부패 운동이 느리게 진행되고, 미온적이며, 비판자들을 침묵시키는 데 활용된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2012년에 전 보건부 장관 우르뱅 아워노(Urbain Awono)는 병원에 모기장을 납품하는 허위 계약과 관련된 횡령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아워노는 2008년 대통령 연임 제한 폐지를 비판한 직후 체포된 인물이다. 2012년에는 내무부 장관 마라파 하미두 야야(Marafa Hamidou Yaya)가 새 대통령 전용기 구매와 관련된 스캔들(알바트로스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고,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전 총리 에프라임 이노니(Ephraim Inoni)는 횡령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야야와 이노니 모두 폴 비야 대통령에 대한 잠재적 경쟁자로 여겨지던 인물들이다. 이러한 기소 사례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재판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미국 국무부는 비야 대통령이 2021년에 코로나19 지출을 조사하도록 명령하였으나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느리다고 보고했다. '코로나게이트(Covidgate)'로 널리 알려진 이 조사에서 계약 체결의 불투명성, 배정 예산 초과, 횡령 및 과다 청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2022년 10월, 대통령실 사무총장 페르디낭 응고 응고(Ferdinand Ngoh Ngoh)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으나, 보고 기간 종료 시점까지 추가적인 진전은 없었다.

직권 남용 기소

4

'06 '24 10



시민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헌법적 절차나 법률 체계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의 평가에 따르면, 두 가지 수단 모두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관료의 비효율과 만연한 부패로 인해 민사 법원 명령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시민의 권리가 자주 침해되며, 특히 정치적 반대파의 권리가 빈번하게 침해되고 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영어권 분리주의 운동 지지자들은 더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영어권 지역과 카메룬 북부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통행금지를 발효했다. 정부가 수백 명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장기간 행정 구금 상태로 두는 것은 흔한 일이다. 교도소 환경은 과밀 수용, 열악한 위생, 식량 부족, 조직적인 고문과 강간으로 악명 높다. 더욱이, 2014년 반테러법을 명목으로 군사재판소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시민의 권리는 심각하게 제약되었다.

심각한 차별과 사법 접근성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증거도 있다. 2011년 이후 성소수자 공동체는 카메룬에서 동성애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잇따라 재판에 회부돼 왔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는 카메룬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동성애를 가장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성소수자에 대한 체포와 학대가 크게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성들 또한 상속, 고용 및 재산권 측면에서 법적·실질적 차별을 받고 있다. **가정폭력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되며, 여성 할례는 여성의 약 1%가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카메룬 북부에서 정부는 이슬람 예배 장소를 계속 감시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 착용을 금지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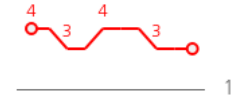
4 | 민주주의 제도의 안정성

카메룬은 민주공화제 제도의 외양을 갖추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독자적인 생명력을 갖지는 못한 전형적인 독재 국가이다. 국민의회와 상원은 민주적 기관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기관들은 정권이 후원과 부패를 통해 엘리트들의 야망을 충족시켜주는 정치적 무대이다. 민주주의와 법치 부문에서의 결함은 뿌리 깊으며, 이러한 결함은 폴 비야 통치의 기반이 되는 정치 구조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은 카메룬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중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2022년 아프로바로미터(Afrobarometer) 조사에 따르면, 카메룬인의 17% 이상은 자국이 비민주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또 다른 42%는 카메룬이 중대한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한다. 영어권 지역의 위기가 본격적인 분리주의 반란으로 확대된 것은 카메룬 민주 정치의 실패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이다.

시민권

3

'06 '24 10



민주적 제도의 성과

2

'06 '24 10



카메룬은 민주적 제도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는, 강력한 1인 중심의 선거 권위주의 국가이다. 극단적으로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은 그가 지지자들을 배치하고 반대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도를 조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내각 회의를 불규칙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민주적 제도를 약화시킨다. 집권당인 카메룬인민민주운동(CPDM)은 정기적인 당 대회를 소집하지 않는데, 이는 당 의장인 비야 대통령이 소집 여부마저도 결정하기 때문이다. 집권당 내에서 후계자를 선출하는 명확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없으며, 향후 특정 시점에 승계 위기가 발생해 민주적 제도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역사적으로 민주 정치에 참여해 왔지만, 선거를 보이콧하거나 국민의회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영어권 지역 분쟁은 카메룬의 민주적 제도에 대한 일부 정치 행위자들의 의지를 더욱 약화시켰는데, 이는 2020년 선거 보이콧 사태와 집권당이 70석 전석을 차지한 최근 상원 선거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5 | 정치적·사회적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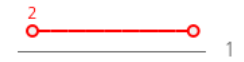
카메룬의 정당 체계는 분열된 야당들 사이에서 지배적·패권적 지위를 차지한 집권당이 주도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집권당 외부의 정당들은 제도적으로 취약하며 사회적 기반 또한 제한적이다. 국민의회에서 꾸준히 일부 의석을 확보해 온 정당은 사회민주전선(SDF), 전국민주진보연합(National Union for Democracy and Progress, NUDP), 카메룬인민연합(Union of the Peoples of Cameroon, UPC), 카메룬민주연합(Cameroon Democratic Union, UDC), 민주공화운동(Movement for the Defence of the Republic, MDR) 등 5개이다. 이 중 사회민주전선(SDF)만이 일관되게 야당 노선을 유지해 왔지만, 현재는 5석의 의석만 보유하고 있다. 각 정당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거나 강한 민족적 성격을 띤다. 2018년 이후 카메룬국가구원전선(Front for the National Salvation of Cameroon)과 카메룬국민화해당(Cameroon Party for National Reconciliation) 같은 새로운 정당들이 등장했지만, 소수의 의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카메룬르네상스운동(MRC)과 유니베르(Univers) 같은 다른 정당들은 다소 인기 있는 대통령 후보를 내세웠지만 의회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카메룬에는 또한 의석 획득 의사 없이 선거에만 출마하는 300개 이상의 '버섯 정당'이 있다.

집권당은 자신들이 마을 단위까지 이르는 전국적인 물리적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의 행정 조직이 선거 기간에만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집권당은 다른 지역보다 대통령의 출신 민족과 같은 민족이 사는 중부 및 남부 지역에서 훨씬 강한 지지를 받는다. 선거 운동에서는 정치적 안정을 호소하면서도, 집권당은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대대적인 후견주의 행위와 노골적인 표 매수를 자행한다.

민주적 제도에 대한
현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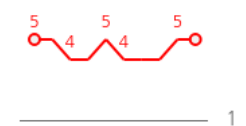
'06 '24 10



정당 체계

5

'06 '24 10



카메룬에는 다양한 사회적 이익집단이 존재하지만, 상당수가 과소 대표되고 있으며 조직화된 이익집단조차 구성원 수 부족과 정부의 업무 개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카메룬노동조합연맹(Confederation of Cameroon Trade Unions, CCTU)이 대부분의 노조 활동을 조율한다. 그러나 조합원 수는 여전히 적고(약 20만 명), 카메룬 노동자 대부분은 과소 대표되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한다. 더욱이 카메룬노동조합연맹(CCTU)은 철저히 감시받고 있으며, 정부는 경쟁 노조 조직의 설립도 장려해 왔다. 조사 기간 동안 미국 국무부는 여러 차례의 파업이 예고되었다고 보고했다. 일부는 성공적인 협상 후 철회되었고, 일부는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나, 또 다른 일부는 일정 수준의 탄압을 받았다. 농업계는 여러 협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지만, 서부주 및 북서부주에서 훨씬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기업 간 협력기구인 카메룬고용주협회(Cameroon Employers' Association, GICAM)가 조직되어 있지만, 그 지도부는 집권당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카메룬에는 또한 마을과 민족 집단에 기반한 다양한 엘리트 협회가 있는데, 이들은 집권당에 의해 침투당하거나 포섭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은 카메룬의 이익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시민교육, 거버넌스, 민주주의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 네트워크도 전무하다.

2016년 이후 영어권 지역의 이익집단들은 강도 높은 탄압을 받아왔다. 2017년 1월 카메룬 정부는 영어권 주민들의 자결권을 옹호하던 남부카메룬국민회의(SCNC)의 활동을 금지했다. 정부는 또한 문화적·경제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법률 단체, 교사 노조, 학생 조직을 한데 모은 우산형 조직인 카메룬영어권시민사회연합(CACSC)의 활동도 금지했다.

2021년 미국 국무부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를 인용하여 카메룬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정의가 노동조합이나 고용주 대표의 정당한 활동 수행과 관련된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메룬이 현재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지만, 카메룬인들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추세는 부정적이다. 2022년 아프로바로미터에 따르면, 카메룬인의 거의 3분의 2가 자국 민주주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지만, 민주주의가 다른 형태의 통치 방식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5%에 불과하다. 이는 2017/18년 62%, 2014/15년 67%에서 하락한 수치이다. 이러한 추세는 영어권 지역 인구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카메룬의 선거는 대체적으로 폭력 사태 없이 치러진다. 패자가 선거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이에 반대해 폭력을 동원한 적은 없다. 그러나 영어권 지역의 현재 분리주의 운동은 카메룬 민주주의의 현 상태를 거부하는 동시에, 분쟁이 민주적 수단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익 집단

4

'06 '24 10



1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해당 없음

'06 '24 10

n/a

1

카메룬의 사회적 자본은 집단을 잇는 가교형보다는 집단 내부의 결속에 초점을 둔 결속형에 가깝다. 민족 협회가 만연하고, 국가 권력 구조에 접근하는 데 있어 친족 관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체 간 신뢰는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양상은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도시에서도 공동체 생활을 돌보는 마을 협회를 흔히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민족적 편향에 기반한 자원 배분 방식과 국가 기관 및 권위 있는 기관에서의 특정 집단 과소 또는 과대 대표 문제가 정치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가 통합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실제로는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민족 간 균형 맞추기와 분열 통치 전술을 가리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인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악화되며,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통해 해결책을 찾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는 시민들에게 보건연대기금 모금을 독려했다. 이 기금은 4천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주로 정치인과 기업체로부터)을 모았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이 횡령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어권과 영어권 사이의 분열은 현재 사회 자본 형성에 있어 가장 큰 장벽이며, 최근의 위기는 이러한 경향을 크게 악화시켰다. 프랑스어권 카메룬인과 영어권 카메룬인 사이의 신뢰는 분쟁 이전에도 이미 낮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폭력의 확산은 두 가지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첫째, 두 공동체 사이의 간극을 더 넓히고, 정부가 영어권 주민들을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테러리스트로 묘사할 수 있게 했다. 둘째, 폭력은 또한 영어권 공동체 내부의 유대도 악화시켰는데, 시민들이 분리주의자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밀고자와 정권 협력자('블랙 레그(Black legs)'라고 불림)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대한 공격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보코하람과의 전쟁이 정점에 달했을 때 카메룬 북부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 사회적 자본이 크게 잠식됐다.

사회적 자본

4

'06 '24 10

4

1

II. 경제 전환

6 |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카메룬의 경제 구조와 성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장 민주주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1990년대 이후 빈곤 완화와 인간 개발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룬은 여전히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으며 그 발전마저 정체된 상태이다.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중 유일하게 순 취학을 항목만 달성되었으며, 영어권 위기가 시작된 이후 많은 지표가 오히려 악화되었다. 2022년까지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중소기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질문 점수

사회경제적 장벽

3

'06 '24 10

3

1

2021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666달러인 카메룬은 중하위 소득 국가에 속한다. 카메룬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산출값은 0.576으로, 현재 '중간 인간개발' 범주 내에서도 최하위권에 위치하며, 189개국 중 151위를 기록하고 있다. 기대수명은 61세이며, 인구의 47%가 하루 3.6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는 2010년 수준에서 약간 개선된 것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다른 개발 지표에서도 개선 정도가 일정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55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카메룬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지속적인 불평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인구의 40% 이상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빈곤은 농촌 지역인 극북부주와 동부주에 집중되어 있다. 게다가 도시 인구의 약 33%가 위생시설이 부족한 슬럼가에 거주하고 있다. 불평등을 반영할 경우, 카메룬의 인간개발지수(HDI) 값은 0.318로 떨어지며, 이는 중간 인간개발지수(HDI) 국가 평균(0.483)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지니 계수에 관한 가장 최근 자료는 2014년 것으로, 소득 불평등 지수가 46.6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성불평등 또한 우려 사항이며, 특히 교육 수준과 노동시장 참여에서 격차가 두드러진다. 현재 카메룬의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는 0.56으로, 중간 인간개발지수(HDI) 국가 평균(0.489)보다 약간 높다.

경제 지표		2019	2020	2021	2022
GDP	백만 달러	39671.0	40773.2	45338.3	44341.6
GDP 성장률	%	3.5	0.3	3.6	3.5
인플레이션(CPI)	%	2.5	2.4	2.3	6.2
실업률	%	3.6	3.9	4.1	4.0
해외 직접 투자	GDP 대비 %	2.6	1.7	2.1	2.0
수출 성장률	%	11.2	-14.4	3.4	3.0
수입 성장률	%	11.4	-17.1	13.8	-3.7
경상수지	백만 달러	-1695.1	-1512.4	-1795.0	-
공공 부채	GDP 대비 %	41.6	44.9	46.8	45.5
외채	백만 달러	12872.3	14783.9	16003.3	-
총 부채 상환액	백만 달러	1137.3	1202.6	1318.0	-

경제 지표		2019	2020	2021	2022
정부 소비	GDP 대비 %	12.1	12.3	12.0	11.6
공공 교육 지출	GDP 대비 %	3.0	3.1	2.8	2.6
공공 보건 지출	GDP 대비 %	0.4	0.6	-	-
R&D 지출	GDP 대비 %	-	-	-	-
군사 지출	GDP 대비 %	1.1	1.0	1.0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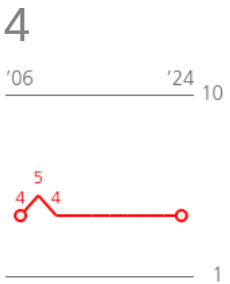
출처(2023년 12월 기준): 세계은행(The World Bank),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군사비지출 데이터베이스(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7 | 시장 조직 및 경쟁

시장 기반 경쟁 체제는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법적 체계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으나, 자유 시장 환경에는 여전히 상당한 장애물이 존재한다. 카메룬은 중앙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ntral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CEMAC) 체제의 당사국이다. 또한, 17개 아프리카 국가의 사업 규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법률 및 규정 체계인 아프리카상법통일기구(Organization for the Harmonization of Business Law in Africa, OHADA)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카메룬의 은행업은 중앙아프리카국가은행(Bank of Central African States, BEAC)이 관리하며, 카메룬은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IPO)의 창립 회원국이다. 이러한 지역 통합 체계는 특히 외환 접근, 신용정보기관 인가 및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경쟁적 시장 조직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시장 경제를 위한 조건은 충족되지 않고 있다. 인구의 거의 90%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2014년 기준 가장 최근 수치는 87.1%), 국가 개입과 부패,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국가는 주요 식료품과 휘발유를 포함한 특정 상품에 대해 가격 및 수입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제의 특정 부문을 독점하는 130개 이상의 국영기업이 있다. 카메룬은 재산 등기, 공공조달, 수입 허가 발급 등에서 결함이 있어 열악한 사업 환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AIPO)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역시 미흡하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능력이 제한되고 외국인 투자 성장이 저해되었다.

시장 조직



상업부 산하 국가경쟁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 NCC)는 경쟁 규칙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이다. 그러나 많은 부문에서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130개 이상의 국영기업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농산물 수출을 독점하는 단일 유통위원회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카메룬통신(Cameroon Telecommunications, CAMTEL)은 국내 전화 및 인터넷 기반시설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소매 이동통신 부문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또한 국영 정유회사(SONARA), 설탕회사(CAMSUCO), 팜유회사(SOCAPALM), 면화회사(SODECOTON), 양조회사(Cameroon Breweries) 등도 각자의 사업 부문을 점유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로 인해 수익성은 감소하고 정부 예산에 부담을 주는 상당한 공공부채가 발생했다. 또한, 정부는 석유 부문의 토탈(Total), 건축자재 부문의 라파르주(Lafarge), 투자은행 부문의 소시에테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등 프랑스 기업을 우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가경쟁위원회(NCC)는 지금까지 경쟁 침해와 관련된 사건을 기소한 적이 없다.

카메룬은 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의 회원국이 아니다.

카메룬은 세계무역기구(WTO) 및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ffice, WCO)의 협정, 그리고 중앙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가 정한 공동 무역 규범 등 다자간 무역 체제를 준수하고 있다. 또한, 카메룬은 여러 제한적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했으며, 특정 무역 장벽이 완화된 몇몇 자유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s, FTZs)를 유지하고 있다. 카메룬의 영연방 및 CFA 프랑 통화권 가입 역시 무역 원활화를 목적으로 한다.

2016년에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의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이 발효되어, 카메룬은 유럽연합(EU)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대가로 대부분의 상품을 유럽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카메룬은 2020년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TFA)를 비준했으나, 실제 이행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2020년에 카메룬은 인권 침해 문제로 인해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에 따른 특혜 무역 자격을 상실했다.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자유 무역에 대한 여러 공식적·비공식적 장벽이 존재한다. 특히 두알라(Douala) 항구에서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으로 인해 지연이 길어지고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 카메룬은 중앙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의 공동대외관세를 준수하며, 이는 원자재에 대한 10%부터 특정 소비재에 대한 30%까지 네 단계의 관세율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장기간 소요되고 때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 허가 및 등록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일부 품목(특정 섬유, 육류, 수입 설탕, 주류, 니코틴 제품 등)은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을 토대로 관세를 산정하는 관행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 보조금이나 수입 할당량은 존재하지 않지만, 정부는 커피, 코코아, 금, 다이아몬드 수출에 대해 등급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환경 보전을 위해 특정 유형의 임산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경쟁 정책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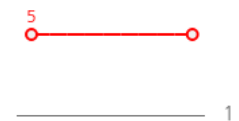
'06 '24 10



대외 무역 자유화

5

'06 '24 10



카메룬에는 15개의 상업은행과 400개 이상의 소액금융기관이 있다. 중앙아프리카은행위원회(Central African Banking Commission, COBAC)가 은행 부문을 감독하고, 중앙아프리카국가은행(BEAC)이 지역 중앙은행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은행 서비스는 주요 도시 지역 외에서는 쉽게 이용할 수 없으며, 카메룬 국민의 20% 미만만이 공식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액금융기관과 모바일 머니는 대부분의 카메룬 국민이 이용할 수 있지만, 2022년 전자결제 이체에 대한 세금 징수가 시작되며 이용이 위축됐을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 은행 부문은 국제 상업은행에 의해 가려져 영향력이 미미하다.

카메룬은 대규모 은행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은행 부문 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상위 4대 은행이 전체 은행 자산의 59%를 차지하며, 야운데(Yaoundé)와 두알라(Douala) 두 도시에서 전체 은행 대출과 예금의 약 90%가 창출된다. 과거에는 일부 지표가 개선되기도 했지만,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부실채권 비율이 거의 15%까지 상승했으며, 은행 수익성은 감소했다. 상환 유예 조치가 만료됨에 따라 은행 유동성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8 | 통화 및 재정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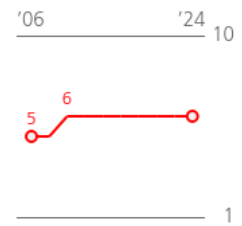
통화 정책은 지역 중앙은행인 중앙아프리카국가은행(BEAC)이 관리하며, 이 기관은 외환보유고를 관리하고, 정책금리를 설정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며, 외환 거래를 규제한다. 카메룬이 CFA 프랑 통화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비교적 안정적인 통화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2년에는 개인과 기업의 외화 결제를 제한하는 규정이 석유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2018년 체결된 합의에 따라, 정부는 외환 환수를 늘리고 중앙아프리카국가은행(BEAC)의 외환보유고를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마찬가지로, 카메룬은 광업 및 석유 계약을 중앙아프리카국가은행(BEAC)과 공유하기 시작했다. 카메룬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회복력을 보여,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이 2022년 중반까지 약 2.4%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마찬가지로, 실질실효환율지수는 100 수준으로, 비교적 건전한 외환 상황을 반영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분쟁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메룬은 재정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왔지만, 불완전한 상태여서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21년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카메룬에 대해 3년간 6억 8,950만 달러 규모의 확대신용공여(Extended Credit Facility)를 승인했다. IMF는 이를 승인하며 카메룬이 개혁을 가속화하고, 재정 관리를 개선하며, 경제를 다각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2022년까지 이러한 개혁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카메룬의 재정 상황은 석유 수입 증가와 코로나19 관련 지출 감소로 개선되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적자가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 개혁은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상당한 하방 위험이 여전히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 2022년 기준 카메룬은 빠른 속도로 부채를 축적하여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47.2%에 이르렀다. 이 부채의 대부분은 외채이며, 중국이 주요 채권국이다. 국영기업은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현재 GDP의 약 12.5%로 추정되는 미공개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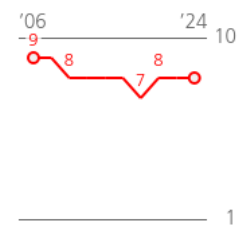
은행 시스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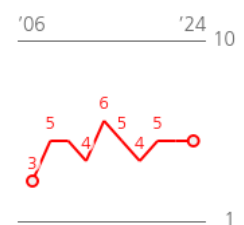
통화 안정성

8



재정 안정성

5



사업은 국가공공부채위원회(National Public Debt Commission)의 승인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개별 대출에 대한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2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카메룬의 채무 위기 위험을 높음으로 분류했다. 또한 유가 상승으로 연료 보조금 지출이 증가했으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추가 재정 지출과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발생했다. 게다가 정부 수익은 주로 석유 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非)석유 관련 부문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적다.

경상수지에 관한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적자 규모가 9억 4,980만 달러에서 2019년 14억 930만 달러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15억 1,240만 달러까지 소폭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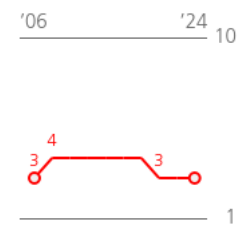
9 | 사유재산

카메룬 법에서는 부족과 농민의 권리를 포함한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계약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토지 소유권 등기부가 존재한다. 그러나 카메룬의 토지 등기율은 매우 낮으며, 매년 발급되는 소유권 증서는 1,000건 미만이다. 재산 등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카메룬 토지의 2%만이 등기되어 있으며, 주로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토지가 주로 특정 토지 보유 제도의 적용을 받아 비공식적인 토지 매매와 불법 점유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는 또한 재산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영어권 지역 분쟁 기간 중 발동된 비상조치로 인해 정부는 무차별적으로 토지를 몰수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카메룬 정부는 주요 인프라 건설과 같은 공익 목적으로 토지를 쉽게 수용할 수 있다. 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이 없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역시 미흡하다. 카메룬에는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AIPO)가 있지만, 법적 구조나 집행 메커니즘이 거의 전무하다. 미디어, 의약품, 소프트웨어 및 인쇄물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번하며, 중국과 인도산 위조품의 유입으로 지식재산권이 더욱 악화되었다.

2020년 국가개발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NDS30)은 경제 성장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카메룬 경제는 상당한 규모의 국영 부문과 중앙집권적 정치 통제 체계에 지배당하고 있어 민간의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준정부기관인 카메룬개발공사(Cameroon Development Corporation, CDC)는 국가 다음으로 큰 규모의 고용주이다. 정부는 또한 민관협력사업을 선호하는데, 특히 외국계 기업이거나 정치적으로 연결된 대기업과의 협력을 선호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정부에 민간 부문 주도의 경제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개혁을 가속화할 것을 요청했으며, 2021년 12월에 이루어진 진전에 대해 전반적인 만족을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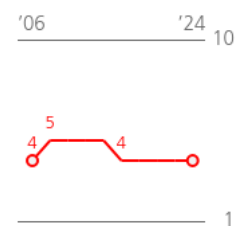
재산권

3



민간 기업

4



중소기업을 위한 공간은 제한적이다. 기술과 같은 분야의 신생 기업들은 영어권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기업 협회인 카메룬고용주협회(GICAM)는 정부에 사업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정기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10 | 복지 제도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조치는 제한적이다. 공공 사회보험 제도인 국가사회보장기금(National Social Insurance Fund, NSIF)은 소규모 공식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미 업무 과부하 상태며 관리 또한 부실하다. 2014년부터는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2016년 정부는 보험료율을 2.8%에서 4.2%로 인상하는 동시에 연금 규모를 늘렸다. 2018년 국가사회보장기금(NSIF)은 모바일 급여 지급을 시험적으로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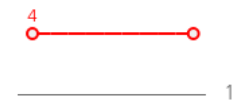
카메룬은 GDP의 5% 미만을 의료 시스템에 지출하며, 서비스 이용 시점에 사용자에게 본인 부담금 지불을 요구한다. 특히 보험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대부분의 카메룬 국민은 가족 구조, 연대 네트워크, 종교 기관과 같은 비공식적인 사회보장 메커니즘에 의존한다. '톤틴(tontines)'으로 알려진 비공식적 공동체 저축 시스템도 흔하다. 공식적인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2017년 국가사회보호정책(National Social Protection Policy)은 보편적 의료 보장 확대를 요구하지만, 이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현금 지원과 같은 비기여형 복지 프로그램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기회의 평등은 부분적으로만 달성되어 있다. 성별, 민족,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카메룬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여러 국제 협약과 협정을 비준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들은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정책적 참여에 있어 장벽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 여성은 상원 의석의 25%와 국민의회 의석의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성별 할당제 덕분이다. 시의회의 10%만이 여성이 이끌고 있으며, 63명의 장관 중 11명이 여성이다. 여성이 직면하는 불이익은 남성에게 비해 낮은 문해율, 교육 등록률, 노동 참여율에서 드러난다. 2021년 카메룬 노동력의 46.8%가 여성이었지만, 상위 직책은 여전히 남성이 차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많은 사회적 관행이 여성의 기회 평등을 제한한다. 유엔(United Nations, UN)에 따르면, 여성의 3분의 1 이상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보고하며, 절반은 일생에 적어도 한 번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한다. 3분의 1은 조혼을 강요받았다고 보고하고, 1%는 여성 할례를 받았다고 보고한다. 민족과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은 매우 뚜렷하다. 카메룬인민민주운동(CPDM) 당원 자격은 고등교육, 사업 대출, 공무원직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비공식적인 전제 조건으로 여겨진다. 공직 시장 진입과 접근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민족 할당제가 사용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특히 영어권 주민들은 1972년 연방제 폐지 이후 지속적인 차별을 받아왔다고 보고하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영어권 지역 분쟁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사회 안전망

4

'06 '24 10



기회의 평등

5

'06 '24 10



특정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도 존재한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경멸적으로 피그미족이라고 불리는 바카(Baka) 사람들은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고위 정부직에서 이들의 대표성도 부족하다. 다른 형태의 차별도 널리 퍼져 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백색증과 HIV 양성 판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강한 사회적 낙인이 따라붙는다. 카메룬은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으며, 해당 공동체 구성원들은 심각한 차별에 노출돼 있다. 동성 간 성행위는 불법이며, 매년 성소수자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투옥, 괴롭힘, 공개적 신상 노출 사례가 발생한다.

11 | 경제 성과

카메룬은 중앙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에서 가장 크고 다각화된 경제를 보유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성장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결과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실질 1인당 GDP는 증가하지 못했다. 2021년 실질 1인당 성장률은 0.9%였던 반면, 2020년에는 1인당 성장률이 -2.0%로 감소했다. 2021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는 4,064달러였다.

석유 수입 증가로 카메룬의 재정 상황은 개선되었지만, 부채, 거버넌스,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과 관련된 지속적인 우려가 경제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카메룬의 성장은 부채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 및 공공사업에 대한 정부 투자, 주로 국제 원자재 가격에 의존하는 일부 산업 부문, 그리고 소규모 공식 부문에 의해 유지된다. 일부 경제 부문은 영어권 지역 위기로 인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로 팜유 및 바나나 산업이 이에 해당된다. 외국인 투자는 2021년 GDP의 1.7%에 불과했으며, 이는 전년도 2.6%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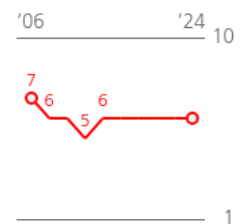
인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문제이다. 2021년과 2020년 인플레이션율은 각각 2.3%와 2.4%였다. 공식 실업률은 3.9%, 3.8%로 낮아 보이지만, 대규모 비공식 부문을 고려할 때, 해당 지표의 통계적 실효성은 매우 낮다. 부채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으며, 2021년과 2020년에 공공 부채가 각각 총 부채의 45.5%와 44.9%를 차지했다.

12 | 지속가능성

카메룬은 환경 관련 정책이나 규제가 불충분하며 법 집행이 미흡하다. 카메룬은 에너지 생산에서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토지, 수질, 대기 오염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팜유, 광물 채굴, 도로 개발에 대한 투자 증가로 지난 10년간 삼림 벌채율이 높아져 현재 연간 벌채율은 약 1%로 콩고 분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살충제 사용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 열악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대량의 쓰레기가 환경에 직접 배출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산업 폐수와 폐수의 부실한 관리(하수의 1% 미만만 처리)로 인해 수원과 수자원이 오염되었다. 해양 생물 자원, 특히 어업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불법 어업 증가로 인해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남획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실패로 인해 카메룬을 '예비 비협력국(Yellow Card)'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대기 오염 물질을 측정할 자금조차 거의 없지만, 도시화로 인해 주요 도시에서 오염 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카메룬은 또한 기후 변화에 매우 취약한데 현재 북부 지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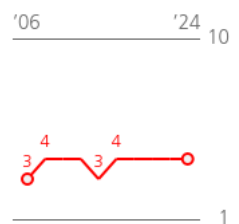
산출 역량

6



환경 정책

4



사막화가 시작되었다. 카메룬은 현재 예일대학교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에서 153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의 법적·규제적 환경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에 부적절하다. 카메룬은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서명국이며, 2015년 파리협정(Paris Accords)을 포함한 다른 지역적·세계적 환경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카메룬에는 국가기후변화관측소(National Climate Change Observatory, ONACC)가 있지만, 이것이 어떠한 정책 변화로도 이어지지는 않았다. 환경·자연보호·지속가능개발부(Ministry of Environment, Nature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INIPED)는 재조림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지만, 새로운 법률 제정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환경·자연보호·지속가능개발부(MINIPED)는 2020년 국가개발전략 수립 과정에서 자문을 받았지만, 그 결과로서의 구체적인 정책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

카메룬은 교육 정책에서 일정 수준의 진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문해율 향상과 초등학교 취학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초등학교 학비 납부제는 2000년에 폐지됐다. 다만 중등학교 취학률은 40%로 감소했다.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은 지난 10년간 GDP의 3% 안팎에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카메룬의 유엔 교육지수도 지난 10년간 약 0.5 수준을 유지했다.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데이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스템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교육 접근 수준에서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며, 북부 지역과 극북부주에서는 취학률이 훨씬 낮다. 소득 수준과 성별에 따라서도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이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교사의 결근 문제와 교육부 및 학교 교육내 부패가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초·중등교육에 비해 훨씬 적었다. 영어권 주민들은 언어적 제한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 왔다. 영어권 분리주의자들도 의도적으로 교육 부문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2022년 영어권 지역의 약 200개 학교를 재개교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가 여전히 폐쇄된 상태이다.

교육 정책/연구개발

4

'06 '24 10

4

1

거버넌스

I. 난이도

카메룬의 거버넌스 역량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은, 특히 인접한 내륙국과 비교할 때 중간 수준이다. 아프리카 경제의 전형적 특징이 여러 가지 나타난다.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국가 역량을 약화시킨 식민지 유산, 정부 수출 및 재정 수입원으로서 천연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말라리아 등 열대성 질병에 따른 인적 자본 감소, 높은 농촌 빈곤율, 취약한 기반시설, 사막화와 기후 변화의 영향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룬은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다각화된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이며, 많은 유리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크고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 방대한 천연자원 부존량, 유리한 기후 조건, 해양 접근성, 그리고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위치가 그것이다. 게다가 카메룬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 구조적 요인을 과소평가하지 않더라도, 정치적·경제적 변혁의 장애물은 구조적 요인보다는 정부 정책에 더 크게 기인한다.

카메룬에는 다양한 시민사회 전통이 있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권위주의 통치가 시민사회 발전을 제한했다. 초기 시민단체의 상당수가 집권당에 침투당하고 포섭되었다. 시민사회, 특히 영어권 단체들은 1990년대 초 다당제로의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후 조직적 분열과 정치적 무력화 과정을 겪었다. 최근 등장한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은 노골적으로 민족적이거나, 정부 후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시민사회 참여는 주로 도시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많은 단체들이 기본적인 사무실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인구의 약 50%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 시민사회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전국적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 참여율은 꾸준히 감소해 왔다. 영어권 위기는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사회적 신뢰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영어권 지역의 시민사회 운동 대부분이 금지되었고, 이 갈등은 일부 프랑스어권 주민들 사이에서 영어권 주민들이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 한다는 인식을 심화시켰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신뢰는 전반적으로 낮다. 공동체 간 신뢰는 약한데, 이는 민족 단체가 만연하고, 국가 위계에 접근하는 데 있어 친족 관계가 중요한 통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이러한 패턴은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 지역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중심으로 한 마을 단체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구조적 제약

6

'06 '24 10



1

시민사회 전통

8

'06 '2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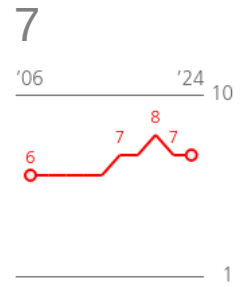


1

지난 10년간 카메룬은 심각한 사회적·종교적 갈등에 직면해 왔다. 영어권 위기는 막대한 인도주의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했다. 4,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70만 명이 국내 실향민이 되었으며, 6만 명이 난민이 되었다. 정부군은 마을 초토화, 강간 및 고문 사용을 포함한 무차별적 폭력 사용으로 심한 비판을 받아왔다. 반군 단체들도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점점 더 많이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금전 갈취, 협력자로 여겨지는 자들에 대한 처벌, 또는 경제적 제재 부과를 위한 것이다. 영어권 위기는 또한 극북부주의 보코하람과의 갈등을 훨씬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이후 보코하람 활동이 증가했는데, 이는 영어권 지역으로 보안군이 재배치되면서 생긴 공백을 보코하람이 이용한 결과로 부분적으로 해석된다. 이 분쟁에서도 심각한 인권 침해가 확인되었고, 막대한 인도주의적 피해가 발생했다.

다른 형태의 폭력 발생 위험도 실재한다. 민족적, 지역적, 종교적 정체성은 강화되며, 소외나 특혜 의혹을 주장하기 위해 사적·공적 담론에서 자주 언급된다. 지지 기반을 동원하거나 잠재적 지도자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는 관행이 흔하다. 일부 집단은 지속적으로 대립적인 구도 속에 놓인다. 예를 들어, 서카메룬의 바밀레케(Bamileke)족은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널리 여겨지며 지나치게 야심적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베티(Beti)족(폴 비야 대통령과 같은 민족)과 같은 다른 집단은 권력의 상층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권력을 양보하려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승계 시 서로 다른 민족 집단들이 정치 권력을 놓고 경쟁하게 되므로 이러한 긴장 상태를 폭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분쟁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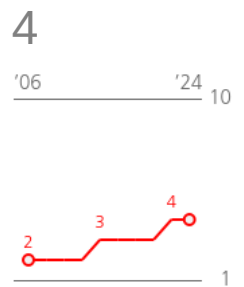
II. 거버넌스 성과

14 | 조정 역량

정부는 카메룬 비전 2035 프로그램, 국가개발전략(NDS30, 2020-2030),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대한 약속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전략적 우선순위를 수립했다. 정부의 자체 성명에 따르면, "국가개발전략(NDS30)은 경제적·사회적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고, 내부로부터의 포용적 개발을 촉진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기회를 보존함으로써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를 신흥공업국 지위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 네 가지 축에 초점을 맞춘 207페이지 분량의 종합 계획서를 준비했다: (1) 국가 경제의 구조적 전환, (2) 인적 자본 개발과 복지, (3) 고용 및 경제 통합 촉진, (4) 거버넌스, 지방 분권 및 국가의 전략적 관리.

질문 점수

우선순위 설정



국가개발전략(NDS30)이 카메룬 정부의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보여주지만, 목표치가 과도해 보이며 그 이행은 외부 행위자들에게 크게 의존한다. 정치 지도부의 초점은 명시된 목표의 달성보다는 풀 비야를 대통령직에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혁의 상당수는 수십 년간 관련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끝에 다자간 대출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어렵게 이루어졌거나, 카메룬의 중앙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 회원국 자격으로 인해 의무화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개혁은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당초 의도했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정부 기관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며, 비야 지지자들이 후원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문제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과대 내각, 지나치게 비대한 공무원 조직, 취약한 국회 등으로 이어진다. 정책 결정은 일반적으로 협소한 정치적 목표에 의해 좌우되며, 주로 정권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정한 정치적·경제적 제도 개혁을 시행하는 것은 정권 지지자들의 이권 개입 역량을 위축시킴에 따라 정권 핵심 기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만연한 부패, 취약한 책임성, 분절된 관료제가 주요 정책 과제의 이행을 제한한다. 카메룬은 특히 거시경제 프로그램에서 외부 지원을 받아 만족스러운 점수로 국제통화기금(IMF)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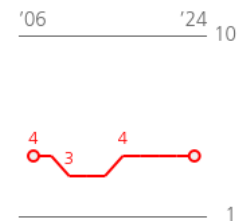
예를 들어, 강력한 경제 정책팀은 카메룬이 두알라(Douala) 항구 확장 및 수력발전소 건설과 같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착수하도록 도왔다. 동시에, 서방에서 교육받은 기술관료 집단과 소수의 개혁 지향적 관료들이 선별적 민영화, 공공지출 관리 개혁, 재정 및 통화 정책 자유화를 통해 안정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공공재정 관리 개혁, 은행 개혁 및 민영화에 대한 각종 문제와 지연이 지속되고 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불균등하게 시행되어 극북부주·동부주와 나머지 지역 간 지역적 격차를 고착화시킨다. 영어권 지역의 분쟁도 북서부주 및 남서부주에서 재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정부의 역량을 약화시켰다. 우선순위 설정과 마찬가지로, 부패는 현 정권의 영구 집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안된 정치적 메커니즘의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

정치 지도부는 실수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일부 외부의 개혁 요구에 호응하기도 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는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취약 계층 지원을 포함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기부금 모금 및 자금 조달 노력은 거부했다. 정부는 마찬가지로 2017년 국가사회보호정책과 2020년 국가개발전략(NDS30)에서 빈곤 퇴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했다. 정부는 비판에 민감하다. 가벼운 형태의 비판도 가혹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는 보코하람과의 전쟁 및 영어권 분쟁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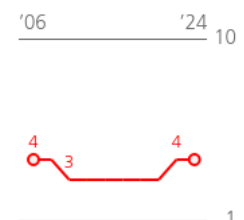
이행

4



정책 학습

4



공직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무시한다. 논쟁적인 현안을 둘러싸고 대화에 참여하려는 진정한 노력은 부재하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혁 프로그램에 착수하는 경우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15 | 자원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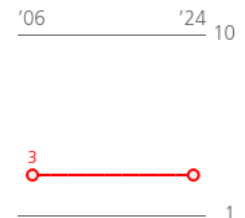
정부는 자산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자원은 주로 정치적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배치된다. 거시경제 계획 등 행정적 효율성이 발휘되는 영역이 일부 존재하지만, 공공 부문 전반에서 부패가 만연해 있다. 정부는 공공 조달 과정에서 막대한 자원을 잃고, 프로그램 집행 중 지방 수준에서는 예산 누수가 발생한다. 내각과 공무원 조직은 비대하며, 인사 행정 역시 정치적 편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야운데(Yaoundé)에는 보건부 장관, 대통령실에서 파견된 보건부 국무장관, 그리고 10명의 보건부 지역 대표가 있다. 내각 개편은 흔하며, 대체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다. 2021년에 시작된 지역 분권화 과정은 자원 사용의 효율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주로 대통령이 배분할 수 있는 후원 자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대통령 중심 체제 내의 정치적 분열과 부패가 정책 조율을 제한한다. 총리가 정부 부처 전반에 걸쳐 조율 책임을 지고 있지만, 모든 것은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폴 비야는 1년 중 최소 3분의 1을 해외에서 보내며, 그 결과 2년 동안 내각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적도 있다. 카메룬 정부의 비대한 규모는 정책 조율을 더욱 제한한다. 대부분의 장관들은 역량이 아닌 정치적 계산에 따라 임명된다. 대통령은 또한 각 부처의 사무총장을 직접 임명하고,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대리인을 파견한다. 이러한 구조는 갈등이 만연한 환경을 조성하여, 개별 부처 내에서 경쟁과 협력 부족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분열 양상은 지방 차원까지 스며들어, 중첩된 권한 구조가 정책 조율을 방해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주지사, 지구 담당관 및 하위 지구 담당관은 직접 선출된 시의회 및 시장, 간접 선출된 지역 의회, 그리고 다양한 지역 위원회 및 부처 대표단과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부패를 적발하고 기소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며 매우 정치화된 것으로 인식된다. 부패 사건을 기소하는 두 가지 주요 기관은 대통령실 산하 국가반부패위원회(NACC)와 특별형사법원이다. 2006년 이후 '참새매 작전'으로 알려진 조직적인 반부패 운동이 있었으며, 이 작전으로 수십 건의 유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감사부는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부 재정 대부분은 최고국가감사원의 관할하에 있는데, 이 감사원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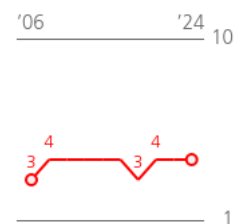
자산의 효율적 활용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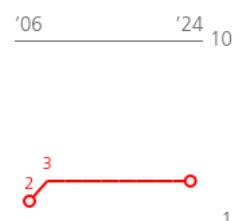
정책 조정

4



반부패 정책

3



중앙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 회원국들은 다자간 대출기관과 협력해 공공 재정 관리 체계를 통일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나, 카메룬은 아직 이 작업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각 부처에서 표준 예산 관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공사업부 산하 국가조달규제청(National Procurement Regulation Agency, ARMP)이 공공 조달을 규제하지만, 구체적인 규칙은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Code)이라는 대통령령 형태로 배포된다. 2015년 국가조달규제청(ARMP)은 만연한 소규모 뇌물 수수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국영기업은 공식적인 공공 조달 절차에서 비공식적으로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에게 자산 신고를 의무화한 카메룬 헌법 제66조가 시행되지 않아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이해충돌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한 법률 2006/001호 역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이 가능하지만 규제나 투명성은 거의 없다. 집권당인 카메룬인민민주운동(CPDM)은 공개 의무나 기부금 상한 없이 유력 기업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6 | 합의 형성

카메룬 정부는 주요 정치 행위자들과 합의를 모색할 실질적인 역량이나 의지가 부족하다. 정권의 권위주의적 성격은 토론을 침묵시키고, 사회의 주요 행위자들과 유권자들이 현 상태를 용인하도록 만든다. 마찬가지로, 민족 정체성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고착화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것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합의의 정도를 제한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합의 결여는 2018년 폴 비야의 재선, 2020년 카메룬인민민주운동(CPDM)의 야권 초토화 사태 등 최근 치러진 논란의 선거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영어권 위기를 종식시키려는 시도도 일방적이다. 영어권 지역의 특별 지위 인정과 2020년 12월 지역 의회 선거와 같은 정책 추진도 비정부 정당들로부터 심하게 비판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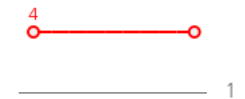
카메룬 정권의 권위주의적 성격은 또한 경제 체제에 대한 합의를 제한한다. 정권 내에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혁 성향의 엘리트가 있지만, 이들은 경제 관리의 점진적 개선과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포괄적 조치에 대해서만 합의를 이루었다. 자본주의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상당한 국가의 경제 개입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는 비야 정권을 영속시키는 정치적 연합을 유지시킨다.

카메룬의 권위주의 정권은 강력한 개혁 성향을 가진 정치 행위자의 출현을 가로막는다. 여당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소수의 개혁가들은 정부와 공공 행정 인력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비민주적 행위자들을 견제할 영향력이 없다. 가장 중요한 비민주적 행위자는 대통령 자신이다. 2018년 폴 비야의 재선으로 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행정부 내의 개혁 동력이 더욱 제한됐다. 비야가 재임하는 한, 잠재적 개혁가들은 탄압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동을 주저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목표에 대한 합의

4

'06 '24 10



반민주적 행위자

3

'06 '24 10



상원을 창설하고, 대통령 재임 중 사망 시 상원 의장이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하도록 지정한 조치는, 정권 내 개혁 세력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신호로 보기 어렵다. 비야가 여당을 장악하고 정치적·시민사회 기반의 모든 야당을 무력화함에 따라 개혁 성향의 세력이 권력을 얻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치 지도부는 분열로 인한 갈등을 관리하는 데 대체로 무능하며, 오히려 사회적·정치적 분열을 조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지역별 할당제를 존중하는 공공 부문 인사 정책인 '지역 균형' 정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여러 민족 집단이 정부와 공공 행정에서 과소 대표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북부와 남부, 영어권과 프랑스어권, 도시와 농촌, 동부와 서부, 기독교와 이슬람, 심지어 영어권 내 북서부와 남서부 공동체 간에도 뚜렷한 분열이 존재한다. 폴 비야의 후계자에 대한 카메룬인민민주운동(CPDM) 내부 논쟁은 주로 어떤 민족 집단이 우위에 설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많은 사람은 군도 민족적 구도를 따라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결국 폭력으로 끝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정부는 이러한 분열로부터 이익을 얻는데, 이는 현 상태의 변화에 위협을 느끼는 정권의 핵심 지지 기반(베티족)을 확보해 주기 때문이다.

분열로 인한 갈등을 관리하지 못하는 정치 지도부의 한계는 영어권 지역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다. 프랑스어권-영어권 분열은 역사적으로 관리하기 가장 어려운 장기적 분열 중 하나였고, 영어권 공동체 내에서도 북서부와 남서부 지역 간 분열이 존재한다. 정부가 시위대와 협상하기 위해 임시 위원회를 파견하면서 동시에 국가 폭력을 동원한 것은 긴장을 악화시켰다. 폴 비야는 2018년 선거 캠페인에서 '경험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영어권 지역 주민들을 카메룬의 통합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했다. 정부가 이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공한 공약과 양보 조치들, 예를 들어 2019년 주요 국가 대화(Major National Dialogue), 특별 지위 지정 또는 2020년 지역 의회 선거 등은 주요 영어권 집단의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갈등 수준을 근본적으로 낮추지 못했다.

정치 지도부는 사회적 자본을 키우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하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시민사회를 반대 세력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2017년 정부는 남부카메룬국민회의(SCNC)와 카메룬영어권시민사회연합(CACSC)의 활동을 금지하여 영어권 운동 세력과의 주요 대화 통로를 차단했다. 정부는 또한 테러 위협을 구실로 삼고 2014년 반테러법을 법적 근거로 활용하여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시민사회 참여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시민사회 단체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일부 시민사회 단체들이 특정 문제(기후변화, 빈곤 감소, 경제 전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계획 위원회는 정부에 의해 포섭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균열/분쟁 관리

3

'06 '24 10



공공 협의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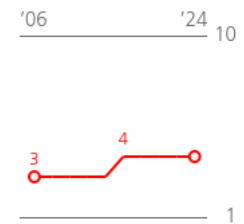
'06 '24 10



정부는 폭력과 과거 불의의 유산을 공개적으로 다룰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카메룬은 여러 차례의 광범위한 폭력과 국가 탄압을 겪었으나, 이러한 사건들이 국가적 관심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의 카메룬인민연합(UPC) 반란으로, 이는 프랑스와 카메룬 정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이 해방 운동은 '반란' 운동이라고 폄하된다. 다른 사례로는 1984년의 유혈 쿠데타 시도, 다당제 선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격동의 시기', 그리고 대통령 임기 제한 폐지에 반대하는 2008년의 전국적 시위가 있다. 최근 극북부주와 영어권 지역에서 인권 침해 혐의가 잇따라 제기되며 정부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국제적 압력 하에서만 마지못해 특정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가장 명확한 사례로, 2020년 정부는 여러 인권 단체와 유엔이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 후에야 응가르부(Ngarbuh)에서 민간인 21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화해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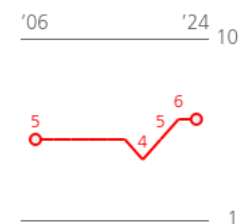


17 | 국제 협력

카메룬 지도부는 국제 파트너들을 주로 경제 개발과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에 활용하지만,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문제를 위해서는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많은 주요 원조 공여국들이 카메룬에서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으며, 카메룬은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 확대신용공여의 3차 심사를 통과했다. 유럽연합(EU)과 프랑스개발청(French Development Agency, FDA)은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많은 비정부기구(NGO)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술 전문성을 제공한다. 2019년 카메룬은 미국과의 특혜 무역 지위를 상실했지만, 2020년 미국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가 카메룬을 '제한적 주재국' 등급으로 격상해 협력을 확대했고, 주로 HIV/AIDS 관련 문제에 집중해 활동하게 되었다. 정치 지도부는 이러한 지원을 활용하지만, 이것이 일관된 장기 개발 전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지원의 효과적 활용

6



카메룬은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개선 노력을 지원할 국제적 파트너가 부족하다. 영연방 사무국(Commonwealth Secretariat)과 프랑스어권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a Francophonie)가 가장 지속적인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권과 민주주의 상황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카메룬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민주주의 원조를 받고 있으며, 주요 제도 구축 노력의 대상도 아니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전미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들은 청년 리더십 증진과 카메룬 북부 분쟁의 영향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시민사회강화프로그램(Civil Society Strengthening Programme, PASC)에 자금을 지원하지만, 현지 계약 파트너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메룬의 표면적인 안정성과 불안정한 지역 내 전략적 위치는 국제 파트너들이 카메룬 정부에 상당한 관용을 베푸는 토대가 되고 있다. 2014년 이후 보코하람의 세력 확산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위기로 인해, 외교관들과 국제 원조 활동가들은 개혁 과제들의 지지부진한 이행을 목인하면서까지 현 정권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는 영어권 위기에 대한 미온적인 국제 대응에서 다시 한번 두드러졌다. 평화적 대화를 촉구하는 외교적 요청 외에, 당사자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실질적인 압력은 가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제 사회와의 협력 전반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카메룬은 주요 개혁 과제를 회피하고 정치나 경제의 실질적인 구조적 변화를 거부해 왔다.

카메룬은 국제적, 지역적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 카메룬은 다국적합동기동부대(Multinational Joint Task Force, MNJTF)에 병력을 파견하고 나이지리아군과 차드군이 자국 영토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마찬가지로 카메룬은 미국이 극북부주에서 드론 기지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했다. 카메룬은 또한 지역 군사 조정 메커니즘으로 형성된 G5 사헬군(G5 Sahel force)의 회원국이다. 2021년부터 미국은 영어권 지역 위기 지속에 연루된 개인들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시작했다.

카메룬은 중앙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 지역의 기둥으로 여겨지지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입지는 다소 엇갈린다. 수십 년 동안 카메룬은 국제 무대에서, 특히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의 의견 충돌 시, 프랑스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다. 그러나 2003년 카메룬은 미국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이라크 전쟁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표결에 기권할 의향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카메룬은 2005년 이스라엘-가자 분쟁에 관한 '골드스톤 보고서(Goldstone Report)'를 지지하는 유엔 투표에서도 기권했는데, 미국이 바카시(Bakassi) 반도 영토 분쟁에서 카메룬을 지지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카메룬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투표에서 기권했으며, 2022년 4월 러시아와 군사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카메룬이 군사적 지원을 목적으로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카메룬은 지역 안보 작전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지만,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의 당사국은 아니다.

카메룬은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CFA 프랑 통화권의 통화 연합, 중앙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 등 많은 지역 기구의 회원국이다. 중앙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 내에서 카메룬은 가장 중요한 시장이자 핵심 생산 거점이다.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은 2009년 바카시 반도 분쟁의 해결로, 이는 특히 나이지리아와의 관계 개선으로 이어졌다. 분쟁 해결로 인해 카메룬과 나이지리아는 지역 안보, 특히 보코하람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 협력은 2018년 초 나이지리아 정부가 자칭 '독립 암바조니아' 행정부 구성원들의 송환을 주선하면서 주목할 만한 분기점을 맞이했다.

신뢰성

6

'06 '24 10



지역 협력

6

'06 '24 10



이 조치는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안보 문제를 위해 더 깊이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상징하며, 국경을 넘어 분리주의 민병대를 추적할 수 있는 카메룬의 특권을 인정한 것이기도 했다. 카메룬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2022년 상호 국경을 확정하는 중요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의 목적은 국경 간 폭력을 억제하고 지역의 안정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진전과 더불어, 카메룬은 2014년부터 G5 사헬군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안보에 기여해왔다. 이 연합은 주로 지역 내 안보 협력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지역 협력 이행에도 불구하고, 중앙아프리카 지역 통합이라는 더 넓은 측면에서 카메룬의 역할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비교할 때, 중앙아프리카는 여전히 상당한 통합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카메룬이 지역 안보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지만,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전반적인 통합과 관련된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진전의 여지가 남아 있다.

전략적 전망

거시경제 개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룬은 극복하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도 극복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관성 상태에 갇혀 있다. 영어권 위기가 정치적 안정 문제를 유권자들의 관심사 전면에 부각시켰지만, 카메룬 상황은 고령의 지도자들이 축출되거나 권력에서 물러나도록 강요받는 대륙의 일반적인 추세와 대조된다. 폴 비야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카메룬이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카메룬의 '비야 이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야의 임기가 그의 사망과 함께 끝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정치적, 제도적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권력 이양 과정에서 매우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며, 폭력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상호 불신, 파벌주의, 민족적 이해관계로 인해 승계 문제는 많은 이들에게 제로섬 게임이 되었다. 우려스러운 징후는 군 내부의 경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일부 정치 엘리트들이 특정 장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상황의 복잡성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결과를 지속시키는 핵심 요인은 카메룬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내 '안정의 섬'으로 간주하는 관대한 국제사회의 태도다. 카메룬과 프랑스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카메룬이 민주주의와 경제 상황을 이유로 심각한 비판을 받는 것을 막아줬다. 더욱이 국제적 지원은 카메룬이 국제 대출 기관들로부터 우호적인 평가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협력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권이 직면한 국내 어려움을 어느 정도 막아줄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지원 수준에 일부 변화가 있기는 했으나, 어떤 원조 공여국도 카메룬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 특히 영어권 운동 세력과의 폭력적 충돌을 이유로 원조를 중단하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야 정권 이후 정권으로의 전환이 비교적 평화롭게 이루어지더라도, 지난 30년간 자리 잡은 제도와 정치 방식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지지를 구축하기 위한 후원 관계의 활용은 만연한 부패와 부적절한 국가 자원 배분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경제적·정치적 개혁에 대한 정권의 저항은 정치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또는 국가 접근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권에 의존하는 엘리트층의 의존성에서 비롯된다. 정치적 유인이 재조정되지 않는 한, 개혁 성향의 엘리트들이 카메룬을 실질적인 경제적·정치적 변혁으로 이끌기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카메룬의 인프라 투자와 해양 천연가스 탐사에 대한 경제적 수익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정책 개혁과 인적 자본에 대한 동등한 투자 없이는 소수만이 경제적 이익을 누릴 것이며, 그마저도 부패와 비효율로 인해 잠식될 것이다. 카메룬은 의료, 교육, 사회적 보호에 대한 지출이 충분하지 않다. 국가의 경제 개입과 상당한 규모의 공공 부문은 민간 기업이 정신을 억제하고, 민간 부문을 대기업 위주로 국한시켜 국가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만큼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카메룬 경제에 대한 전략적 전망은 지역 통합과 같은 특정 이점에 의해 지탱되지만 잠재력에 훨씬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그럭저럭 버텨나가는 카메룬 경제를 보여준다.

국가의 장기화된 침체는 또한 계속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25세 미만의 카메룬인들 사이에서 일자리와 안정적인 생계 수단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앞으로 몇 년간 카메룬의 핵심 과제로 남을 것이다. 카메룬인들은 대부분의 정치 제도에 대한 높은 불신과 환멸을 점점 더 많이 표현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의 붕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인구의 약 25%가 거주하는 영어권 지역이다. 장기화된 폭력은 사회를 양극화시켰고, 정권이 권위에 대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극단적 폭력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분쟁은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마도 그 강도는 예전만큼 격렬하지는 않더라도 세대에 걸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제 관계에 있어 카메룬은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을 수 있다. 현재 카메룬을 둘러싸고 프랑스와 러시아의 영향력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특히 군사 및 경제 협력 측면에서 점점 더 핵심적인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한다.